

경기도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경기도가 양축(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 직거래 구매자금(최대 4천만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FMD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4억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45→68만원, 낙농은 90→130만원, 돼지는 10→15만원, 양계는 4→6천원, 오리는 6→9천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도 사육 마리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은 연 1.5%로 지원되며,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여야 하며,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단가 상향조정은 농축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사업비 2천694억원(사료직거래구매자금 361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2천333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 가짜 친환경 닭고기 유치원에 대량 납품한 부부 검거

화성서부경찰서는 무항생제 친환경 닭고기에 값싼 일반 닭을 혼합해 포장·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2천497개소(1만4천955회)에 닭 68톤(4억 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A모(40)씨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다.

A 씨는 자신 명의의 친환경제품 제조법인과 부인 명의의 유통, 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HACCP’ 인증(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받은 후, 값싼 일반 닭고기를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했고, 닭고기를 조각으로 포장해 구별이 어려운 점, 관계기관의 점검이 대부분 서류점검 위주로 이뤄지는 점 등을 이용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공장을 설립, 제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매출·입 장부 등을 압수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닭고기와 무항생제 닭고기를 53:47 비율로 섞은 후 친환경 제품으로 제조포장·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관리의 제도적 문제점

을 확인해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유통되는 식자재 관리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해 친환경 인증 취소, 둔갑된 제품에 대해 폐기 조치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유사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삼척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적극 지원

삼척시는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축사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축 재해보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이 된 축산농가(법인)이며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가입비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재해보상은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지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2012년부터 11농가에 2,0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3년 11월 기준 22농가에 7,94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했다.

경상남도

창원농기센터, 가축통계 전수조사 실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말까지 '2013년 기준 가축통계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전수방법으로 가축의 사육규모, 성·연령별 마리 수, 가축의 사육에 관한 변동사항 등으로 파악한다.

통계법 제17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356호)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4종과 말, 산양, 토끼, 칠면조, 꿩, 개, 꿀벌, 관상조 등 기타 가축 16종 등 모두 20종이다.

이번 조사에서 꿀벌은 농가 주소지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축 소재 읍·면에서 조사한다. 조사요원은 구청과 지도과 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연중 상시 사육하는 돼지, 닭 농장의 경우 조사시점에 출하해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거나 없는 경우는 올해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관상조를 전업 또는 부업형태로 사육하는 농가도 조사대상이다.

센터 관계자는 "축산업등록 등에 활용되는 이 조사는 창원시 가축의 사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가축통계 조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돼 각종 시책자료와 가축방역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AI 방역 불량 닭·오리 농가 병아리 입식 제한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한파와 과거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12월 말)를 맞아 발생 차단을 위해 사육환경이나 방역이 불량한 닭·오리 농가의 병아리 입식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전남도는 효과적인 AI 차단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등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해주는 축산계열회사 관계자 등과 지난 1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계열회사별 농가 입식 현황과 입식과 출하, 운송 등 자체 방역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사육 환경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식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사육 농가에 일시 입식 일시 출하(올인 올아웃)와 사육밀도를 준수해 적정 병아리를 입식토록 당부했고 신규 입식 시에는 휴식기 동안 축사를 건조시켜 소독 후 재입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며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가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한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토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AI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도 및 시군 등에 26개소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허가 대상 닭·오리 사육농가 1천52농가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담당공무원 295명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철새 도래지 10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방역 실태 확인점검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한 14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닭·오리 사육농가의 95% 이상이 계열화돼 있어 계열회사의 차단방역 실천 의지에 따라 AI 청정지역 유지와 닭·오리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위탁 사육농가에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출입 통제 띠를 설치하며 사육시설에 사료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차단방역 지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금사육농가 고병원성 AI ‘이상 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닭과 오리 등 가금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육용 오리와 토종닭, 꿩 등 1980건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닭 1445건의 항체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검사 결과 양성개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시기상 AI를 전파할 수 있는 철새 도래임을 감안, 농장과 축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농가에 당부했다. 